

## 자 유 토 론

**【김남훈(한성농산기계제작소 대표)】** :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 모두 실질적이고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것은 정치 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또 크게 보면 경직된 민주주의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므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는 충분한 효율성 검토와 부작용등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한 다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농안법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적이 부합될 것이며, 민원이 없어지고 또 농기계의 과소비도 없어질 것이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본인은 정책토론에 찬성을 하면서 특히 반값 보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보조라는 것은 농민을 경제적으로 돕고 국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값 공급이라는 조그만 단어에 구애받지 말고 보조도 지원이고, 용자도 어떻게 보면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200만원 이하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장기 무이자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농기계는 보조는 삭제하고 무이자로 전액 용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농기계가 천만원 짜리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100만원이라도 필요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유용이라든지 기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 공약도 해결되고 높은 효율도 발생할 것입니다. 농업도 하나의 경제주체입니다. 좀더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강박사님 말씀하신대로 경영주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지방비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시의원이고 군의원이라 해도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강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규모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또 반대로 기술자본 집약적인 농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로 상치되지 않는가 합니다. 기술과 자본이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한쪽에서는 경영면적을 확대해서 단지 생산성의 향상이나 편이성에만 목적을 두었을때 그 의미가 어디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태(동양물산(주) 부사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성농산 김사장님께서서는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에 대해서만 반값보조를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의견은 보조는 아주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의 반값보조의 문제점만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농기계의 소형화를 가소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 2000년대 까지 농업인구를 50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값 보조 받는 사람중에서 상당수가 떠나야 할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는 농발위원회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읍·면 단위에서 농발심의회에서 조절해서 선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남겠습니다. 또 수리하는 대신 반값 보조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반값 보조 때문에 동원되고 있는 행정력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해 봤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들에게 경제논리 보다 공짜 심리를 부추기는 악역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가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방 보조금 지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값 보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반값 보조의 개념을 일반적인 맥락에서 지난 대선때 아파트 값 반값 하다보니 반값이 나왔는데 작은 농기계에서 큰 농기계 까지 반값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200만원의 100만원 보조로서 반값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도외시 하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의 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반값 보조는 배제하고 일반 용자의 이자 보조비로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 보조가 금년도에 3,000억, 내년에 3,00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서 보조금을 생산업체에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각 생산업체가 원가 구성상 이자 보전이 4~7% 나올 것입니다. 이 막대한 보조금을 생산업체에 주면 원가를 낮추어서 비싼 기종에서 싼 기종까지 골고루 10~20% 값이 싸지면 현재의 보조에 관계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보조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력의 동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이렇게함으로써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농가만이 기계를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 과연 정부에서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현 예산 회계법상 어려

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고의 전환시기가 왔습니다. 정부도 틀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다른 정책을 펴주실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학균 회장】** : 오늘 열 분의 토론자와 또 김남훈 사장님까지 열한 분중에서 반값을 없애라는 은건은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부사장님이 처음으로 반값을 없애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반값 공급이 아닙니다. 소형 농기계의 보조 비율이 크다는 것 뿐이지 반값보조라하면 대형도 반값이 되어야만 반값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에서 반값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값 공급이 아닙니다. 더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는 반값을 없애자는 얘기는 만나왔습니다. 보완을 하자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재형(대동공업(주) 부사장)】** :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감명을 받은 사항은 농기계는 이용실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100만원 까지 반값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작은 기계에서 큰 기계까지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하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패턴도 그렇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 문화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타야 되고 농기계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써야 되는 우리의 국민 정서적인 그러한 분위기의 편성을 하고 있는 생각도 해 볼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이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위탁영농을 상품으로 하는 영업행위입니다. 농촌진흥청 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품별로 규모 영농 단위가 고정비 투자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시비할 것이 아니라 류관희 박사가 말

씀하셨듯이 과연 2ha 이상의 농가 호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5ha 이상의 영농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토론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동력경운기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 물론 타사도 동력경운기를 생산하기 바랍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의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계를 공급하다 보니, 규모가 작고 또한 범위도 작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많이 나고 동력경운기가 지금 많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농업기계 시장규모를 대략적으로 약 8천억원 정도로 추정하면 동력경운기를 위시한 소형농기계의 점유율은 크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20% 범위내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지적해야 할 사항인지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우리의 영농 단위 경지 면적별로 과연 우리가 이용실태를 조사한 데이터 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농기계가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서로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업기별로 구분을 해서 보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디만, 이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생산업체 쪽에서 볼때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따로 보조한다고 하면 엔진은 산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값보조는 농업의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공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공사장이나 다른 타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류관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좀더 개발해서 선정과정에서 부락의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이유에서 선정이 안되었다는 분명한 소프트웨어 정리가 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것은 주우일 논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품 개발의 단일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감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계 부분에 앞으로 수입을 자유자재로 해서 물론 그 부분에 국산화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50마력급 이상이면 20%만 국산화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은 이번에 분명하게 정부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농기계는 자재검사소에 러시아, 중국에서도 검사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랙터의 종류가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길을 터주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기계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트랙터가 한국에 판매되면 우리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에서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도를 마련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림 ((주)성원 사장)】** : 저희는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농업기계학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트랙터를 사는 분은 어느 농가이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트랙터를 한대 사면 필요한 작업기는 사실 몇십 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트랙터가 아니고 작업기계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작업기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행정적 뒷받침이 작업기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고, 작업기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농촌일손이 모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작업기 공급 대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힘이 없습니다. 선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누가 만드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모지로 만든 것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시고 농업기계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큰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작업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1%정도 밖에 안됩니다. 트랙터 작업기를 공급해서 농업기계화 사업자금에서 가져가는 돈이 총 소요금액의 1% 정도인 것을 보죠. 용자 구분을 합니까? 구분의 대상이 안됩니다. 아무때나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자해주고 보조해 주어야 육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자재검사소에서도 특별한 배려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기계를 빨리 만들어서 검사 받아서 계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상공부에서는 국산화에 적극적이고, 국산화만이 살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또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도 하고 하는데 막상 상공부에서 국산화 기계 품목으로 고시를 받아서 만들면 실질적인 수요처인 농수산부에서 국산화했다고 자금 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에 포함시켜준 것만 해도 사실 감지덕지지만 정부가 농업기계화사업을 하는데 저희 업체가 처음으로 참여 했습니다. 농림수산부내에 축산국, 초지사료과가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서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자금만 일선 행정기관에 내려 보냅니다. 한우젓소 사업이니, 농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일선 군에 가보면 그 자금이 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업자가 가서 얘기 해야만이 이런 자금이 있구나 우리도 배정 받아야지 하는데, 작업기계를 사는 농민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업기계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가을에 쓸 기계를 봄에 공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지 않겠지만 분기별로 작업기계에 대한 홍보를 배려해 주시고 총 기계 구입 자금의 1%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학균 회장】** : 오늘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반값 공급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실무 공무원, 시,군의 농발위의 전문성 결여 문제, 장기 계획 수립, 수도작, 전작, 축산이나 과수등에 관한 관심도 가져달라는 문제, 신농정의 기계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신뢰성 있는 계획을 수립, 수입기종에 대한 문제, 대리점과 농협과의 문제, 농기계 선정이 초기에 집중되어서 분기별로 계획적인 문제, 전업농의 선정 기준 문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농업기계화 사업 정책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값 문제는 의견의 일치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완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완하되 농업기계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이용국(성균관대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 우선 한가지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기계에 대해서 97년도에 50%를 연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대형기계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율을 낮추더라도 확정을 해서 한정된 기간인 97년까지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값 공급에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 작업기 떼어 놓고 트랙터 본체만 한다면 농업기계라고 100%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작업기계 생산업체에서 오셔서 부추기는 것 같은 데 사실은 대만에서도 일찍부터 농업기계를 보급할 때 작업기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정책을 꾸준히 써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차라리 반값공급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본체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작업기는 무제한 50% 보조해서 공급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농업기계의 반값공급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학균 회장】** :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박남중(농업기계화 이용조사과장)】** : 이용국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만은 어떻게 보면 일본 보다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자재기계부터 출발했고 무엇보다 먼저 보조를 한 것이 옥묘센터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옥묘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도 문제는 5ha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자기 소유가 1.5ha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나 면적의 개념 보다는 전업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농업기계 이용기술, 경영기술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나 하는 인적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모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는 기준도 참고하면서 인적사항에 치중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연구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태(동양물산(주) 부사장)】 : 오늘 세미나 계획은 반값 공급에 생긴 여러가지 문제를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늘 제목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학회 토론회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종합적인 정리가 되어서 건의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의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값 공급에 대한 현재 시점의 문제점을 지적고 건의사항으로 학회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려면그 농기계의 성능에 맞게 부담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이용 조직이 제일 좋은지 또 우리에게 적합한 기종 50마력, 100마력 어떤것이 적합한 것인지 학회 차원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 경우 이용조직은 전업농이 좋은지 또 전업농도 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위탁영농도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지원이라는 것이 업계에 계신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농기계 과잉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과잉농기계가 누적이 되면 대부분 업체로 돌아 갑니다. 결국은 공급과 생산을 적절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또 농기계 이용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농기계 반값공급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씨】 : 저는 농민이고 실 수요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다니까 몇가지 부탁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부품관계입니다. 지금 대형 농기계가 전부 수입기계인데 외국산 부품은 오래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것은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고장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급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현재 농기계 보급이 트랙터, 콤바인 같은 미작관계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수나 다른 부분에 있는 농작업기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농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밀기계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의 자체 물품인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

다. 이런 쪽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쌀 농사는 짓지 않을려고 합니다. 미작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작업기를 연구개발해서 우리들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가에 가보면 생산 중단된 기종이라든가, 16마력, 19마력의 소형 트랙터 등 선호하지 않은 기종의 부품이 단종되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업체에서 배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 :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장)】**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하나 답변해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되는 것을 다시 모아서 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측에서나, 농민, 농기계를 만드는 생산자 측면에서나 옳은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병행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월 동안 밤을 세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14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값 공급 논리는 우리나라 농기계 공급갯수중 60%에 해당하는 것이 200만원 이하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값이라는 명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는 반값으로 하고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보조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시행하면서 느낀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예산의 한계 어떠한 제도의 한계의 틀에서 하는 것이지 무한정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계산할 때 용자나 보조나 똑 같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대출 잔액이 농가에 2조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150만 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같은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농업기계 공급을 또는 농가의 부채를 경감을 위해서는 보조지원이 타당하다는 논리에서 이와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기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반드시 보완되는 측면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문제점 중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

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대 정부의 협의 사항도 많고 또 국회까지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점을 당과 청와대까지 보고를 한 후에 정리를 해서 정책에 실행할 것은 실행을 하고 정책에 실행 못할 것은 어떠한 해답집으로라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시행하고 호남지방에 출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농민 200여명이 모이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농정에 불신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값 공급을 틀림없이 5년간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200명 중에 95%였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감안할 적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신의는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에 들어가는 지원자금 중에 농기계 보조 지원이 개별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 지원이 많지만 경지정리라든가, 농지기반조성이라든가 공공성을 차지하는 것이고 직접 농가에 차지하는 것은 보조액이 20%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5년동안 공급이 되면 거의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전부 반값공급의 혜택을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학균 회장】** : 오늘 학회 모임으로는 적게 모였습시다만 진지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강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관리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따로 이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기계화는 어떻게 발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월의 학회 세미나 또는 농림수산부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농어촌 구조대책 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에 관한 문제점은 5월 26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노상하 교수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여 주신 두분,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분, 특히 농촌 현장에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